

【시대에듀 법무사 1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해설】

1. ⑤

①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8호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등과 그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② (○) 가족관계등록법 제9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등록부에는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③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시·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이하 “무인증명서발급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제한 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에 따라 발급의 범위가 제한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④ (○)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9항에 의하면 시·읍·면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 제9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기본증명서에는 다른 증명서에는 없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이 있다. 등록기준지란 아래에 있으며 등록기준지의 지정 또는 변경, 정정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 다만, 기본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이 없다.

=> 따라서 기본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증명서에도라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2. ①

① (×) 민법 제878조에 의하면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즉, 입양은 증인을 요하지 않는 신고이다. 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은 혼인, 협의상 이혼 등이다.

=> 따라서 입양 역시 라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② (○) 가족관계등록법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하면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③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73호 4. 바.에 의하면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성·본 변경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후보완신고 또는 등록부의 정정절차를 통해서는 이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외국식 이름으로 신고한 것은 신고 당시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신고의 흠결을 시정·보완하는 절차인 추후보완신고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④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4호에 의하면 혼인신고서에 「민법」 제812조 제2항 및 제813조에 따라 성년 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수리할 수 있는바 이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상 혼인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수리 당시에 발견했으면 같은 법 제813조에 따라 수리를 거부해야 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⑤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3호 제10조에 의하면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신고에 부모 그 밖의 사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신고서에 그 동의가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그 신고사건에 사실상 동의하였으나 이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또는 신고서의 기재만을 빠뜨린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이를 추후보완하게 할 수 있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시대에듀 법무사 1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해설】

3. ②

①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8호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누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첨부하여 그 기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이를 기록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첨부 없이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고 기록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따라서 감독법원의 허가를 득하여야라는 표현이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②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제10조에 의하면 부 미정의 출생신고란, 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부의 추정이 결합된 경우이므로, 여자가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100일 내에 재혼하였고, 재혼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전혼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자녀가 출생하여,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부가 확정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는 신고로 보아 이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두었다가, 부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후,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③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동일한 사건에 수개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경우에 뒤에 수리된 신고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한 때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맞추어 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의 신고가 시·읍·면을 달리 하여 수리된 때에는 뒤에 수리한 시·읍·면의 장이 이를 정정하되, 먼저 수리된 신고서류사본을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받아서 직권정정서에 첨부한 후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 따라서 뒤에 수리된 신고에 따라라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④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7호 1.에 의하면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란에 한하여 경정하여야 하고, 일반등록사항란의 기록은 경정을 하지 않는다.

=> 따라서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한다SS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3조의2 제1호에 따라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신고이다.

=> 따라서 전자문서로 하면 아니된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4. ③

①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3호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기아의 출생신고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이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부 정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일인이 틀림없으면 기아발견조서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의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라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② (×)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따라서 7일 이내에라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③ (○) 가족관계등록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④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6호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의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란 모가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자녀를 말하므로, 혼인 외의 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없다.

=> 따라서 부의 성명을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란에 기록한다라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⑤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9호 5.에 의하면 성명란의 한자란에 한글과 한자(인명용 한자의 제한범위 내의 것)를 혼합하여 표기한 출생신고 등은 수리할 수 있다.

【시대에듀 법무사 1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해설】

=> 따라서 수리할 수 없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5. ④

① (×) 가족관계등록법 제59조에 의하면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따라서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첨부는 가능하지 않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② (×)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는 민법 제855조 제1항, 호적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혼인 외의 자를 인정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이며, 위 각 법조에 의한 인지신고에 의함이 없이 일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상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위의 각 소송과는 별도로 민법 제865조가 규정하고 있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호적법 제62조에 부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신고가 인지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인 이상 그와 같은 신고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인지에 관련된 소송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대판 1993.7.27. 91므306)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는 민법 제855조 제1항, 호적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혼인 외의 자를 인정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이다. 둘째, 인지신고에 의함이 없이 일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상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위의 각 소송과는 별도로 민법 제865조가 규정하고 있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호적법 제62조에 부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신고가 인지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인 이상 그와 같은 신고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인지에 관련된 소송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③ (×) 가족관계등록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 따라서 그 소의 상대방이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④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6호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인지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별지 2 양식의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종전 성과 본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⑤ (×)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806-3호에 의하면 한국인 생부와 일본인 모 사이의 혼인 외의 자가, ㉠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이므로, 한국인 생부는 인지의 방식으로 인지신고나 친생자 출생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한국인 생부는 인지신고를 하여야 하며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6. ②

① (○) 민법 제883조 제1호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으면 무효이고, 민법 제884조에 의하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66조에 의하면 입양을 하려면 양친은 성년에 달하여야 한다. 성년자이면 기혼·미혼을 불문하고 양친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②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5호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입양신고는 입양당사자인 양친과 양자가 함께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양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민법 제869조 제2항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과 양친이 신고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69조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승낙 없이 입양을 허가

【시대에듀 법무사 1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해설】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양친이 신고할 수 있다.

=> 따라서 양자 본인이 신고를 하여도 된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③ (○) 처가 있는 자가 입양을 함에 있어서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 명의의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처의 부재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동으로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와 양자가 될 자 사이에서는 입양의 일반요건 중 하나인 당사자 간의 입양합의가 없으므로 입양이 무효가 되고, 한편 처가 있는 자와 양자가 될 자 사이에서는 입양의 일반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가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의 입양은 유효하게 존속한다.(대판 1998.5.26. 97트25)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처가 있는 자가 입양을 함에 있어서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 명의의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처의 부재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동으로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와 양자가 될 자 사이에서는 입양의 일반요건 중 하나인 당사자 간의 입양합의가 없으므로 입양이 무효가 된다, 둘째, 처가 있는 자와 양자가 될 자 사이에서는 입양의 일반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가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의 입양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④ (○) 민법 제878조에 의하면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⑤ (○)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락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판 2000.6.9. 99트1633)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둘째,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락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넷째,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7. ③

①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1호 1.에 의하면 시(구)·읍·면의 장은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법 제97조에 따른 국적상실신고를 수리(수리하기 전에 국적보유 의사신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따라서 관할법원에 통보는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②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9호 1.에 의하면 외국인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때 처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방법외국인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귀화의 사유를 기록한다.

=> 따라서 특정등록사항란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③ (○) 가족관계등록법 제96조 제4항에 의하면 신고서에는 1. 종전의 성 2. 창설한 성·본 3. 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④ (×) 가족관계등록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 따라서 3개월 이내라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시대에듀 법무사 1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해설】

⑤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0호 1.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을 인지하는 경우 피인지자는 인지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지자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인지사유와 피인지자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을 기록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국적취득통보(피인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귀화허가통보(피인지자가 성년자인 경우)가 있을 때에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따라서 인지자 또는 피인지자의 국적취득신고에 따라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라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8. ⑤

① (○) 가족관계등록법 제2조,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가족관계등록법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사람이면 그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되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내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 등을 처리할 수 있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② (○) 가족관계등록법 제42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서나 그 밖에 수리한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이 신고인인 경우에도 같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③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24호 제5조에 의하면 신고서에는 법정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예 재산증명, 재일거류민단의 보증서 등)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인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④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21호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이하 “국적회복자”라 한다)에 대하여 국적회복통보를 하는 경우에, 국적회복자가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성명(한자를 포함한다)을 국적회복통보서에 기재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적회복자가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성명(한자를 포함한다)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⑤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21호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외국인의 인명은 신고인(통보자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이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한글로 표기한 해당 외국의 원지음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 동조 제4항에 의하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서 발행한 공문서(예 거민신분증, 호구부 등. 이하 같다)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 국적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통보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를 하는 경우에, 신고인이 해당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그 한국통용의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서에 표기할 수 있으며,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표기된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

=> 따라서 한자도 함께 기록할 수 있다는 표현이 옳은 표현이 아니다.

9. ③

①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로 사망기록을 하여 폐쇄하였을 경우에는 직권정정허가에 의하여 그 사망기록을 말소하여 종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부활한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간이직권정정절차(그 사망신고서류를 감독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해당 신고서류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시밀리를 사용하여 확인한 후 처리)에 의하여 빠뜨리게 된 사망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② (○) 가족관계등록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구)·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대에듀 법무사 1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해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③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8호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에 관한 기록사항 중 출생 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성별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등록부의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 시(구)·읍·면의 장에게 별지 양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읍·면의 장은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기록한다.

=> 따라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라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④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4호 제1조에 의하면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에는 부활 없이 정정한다. 그러나, 그 가족관계등록부가 위법한 것이어서 폐쇄된 경우에는 기록을 정정할 수 없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⑤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21호 제11조에 의하면 외국의 국호와 지명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한글표기를 기재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권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를 준용하여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10. ①

① (×) 호적선례 제3-468호에 의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호적에서 말소된 자는 그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그의 출생신고로 부의 호적에 입적되므로 사건본인의 호적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으로 말소되어 호적이 없는 상태에서 생부의 출생신고로 부의 가에 입적하는 경우 말소된 호적상의 성명과 생부의 호적에 입적되는 성명이 서로 다르다 해도 개명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동일인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로는 위 말소된 호적등본과 판결 및 출생신고서 등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서로 다른 경우 개명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② (○) 신청인의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달리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시절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개명신청권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대결 2009.8.13. 2009스65)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③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3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④ (○) 가족관계등록법 제124조 ㄱ1항에 의하면 제121조 및 제12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읍·면의 장(제2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라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⑤ (○) 가족관계등록법 제123조에 의하면 시(구)·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 재판은 과태료를 부과할 시·읍·면의 장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행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